지역인재 의무채용, 문재인정부가 챙긴다

김승수 전주시장 주도 정책,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포함 법제화 '탄력' … 전북지역 고른 발전 기대

김승수 전주시장이 주도해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가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현실화에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최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주문했으며, 이번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명시하면서 계획을 구체화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4대 복합.혁신과제'에 포함시켰다.

4대 복합.혁신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핵심공약과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과제이거나 정책집행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 추진해야 할 과제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이 앞장서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전주시가 민선6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공약사업이자 국가 균형발전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 남아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시는 향후 정부와 정치권 등을 상대로 법제화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도내 대학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인재 채용 방안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등에 대해 꾸준히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제화 이전에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상 최악의 청년취업난을 극복하고,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방지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에 법제화를 건의하고, 전북지역 종합대학 총학생회장 및 부총장 간담회,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자회의,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부서장 간담회를 통해 법제화 필요성 및 공공대응에 나서왔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과 지역구 국회의원, 전국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도 발표하는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체용 법제화 필요성을 널리 확산시켜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동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장해 왔다"며 "혁신도시가 과거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역으로 내려온 것은 지역을 살리고 지역인재를 키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포함한 국가 균형발전을 약속한 만큼 전주시를 포함한 전북지역이 모두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부동산거래, 스마트폰으로

오는 8월부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전자계약서만 작성하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 시 종이계약서를 대신해 컴퓨터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활용한 전자계약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 절차와 동일하며, 기존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 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 돼 별도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할 필요가 없다.

거래 시스템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세권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등기수수료를 약 30% 가량 절감할 수 있고,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등의 첨부물 생략, 은행 대출시 우대금리 등을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전자계약서는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도 지원할 수 있다.

김종엽 생태도시계획과장은 "전자계약 시행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사전교육 등으로 부동산 거래 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한 50대 구속

단순 화재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실린 차 불태워… 법원 "도덕적 비난 가능성 커"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 화재로 위장하려 했던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6)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1월 4일 오전 5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 인근에서 주자된 차 안에서 아내 고모(53)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차량결함으로 단순 화재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살해한 아내가 실린 차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함께 새벽 예배를 보고, 범행 후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타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당초 고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이 농수로에 빠졌는데 앞범퍼가 거의 파손돼지 않는 등 차량의 파손정도가 경미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차량의 엔진과 같은 차체가 아닌 차량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감식결과가 발표되고, 부검결과 고씨가 교통사고 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남편 최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남양주의 한 성인 PC방에서 도박게임을 하던 최씨를 검거했다.

이 후 경찰조사 과정에서 당초 최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뒤늦게 살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현재 암투병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17년 동안 고락을 같이 한 부인을 살해하고 불을 질러 사고로 위장하려한 피고인의 범행은 도덕적 · 법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민 기자

전주시, 올 하반기에도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 추진

전주시가 올 하반기에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보건소는 오는 8월 중순부터 12월까지 관내 5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보건교육, 진료.건강상담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하반기 '100세 행복경로당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민선6기 주요 공약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건소는 지난달 각 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전 답사를 진행하고 하반기 사업 대상 경로당 50개소를 최종 선정했으며, 다음달 인봉경로당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안재용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20일 수해지역으로 파견되는 긴급지원단을 격려했다.

수해복구 지원해준 은혜 갚는다

전주시, 수해피해 발생한 청주시 긴급 복구단 파견

전주시가 과거 홍수피해를 입었을 때 수해복구를 지원해준 청주시가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 피해복구 지원에 나섰다.

청주시는 앞서 지난 2005년 전주시가 폭우로 인해 피해 복구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게 물자와 인력을 지원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일 장마철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에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날 수해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500명에게 식사를 제공할 이동 밥차와 전주시 수돗물 병입수인 '전주얼수' 5000병 등 구호물품을 실은 탑차, 자원봉사자 70여명을 청주시 수해지역에 파견, 침수지역 주택복구와 수재민 식사, 세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센터는 앞서, 지난 19일에도 6명의 인력과 빨래차 1대, 화물차 1대, 승합차 1대로 긴급지원단을 파견해 수해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 청주시 모충동에서 세탁 및 토사 제거 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은 이날 수해지역으로 파견되는 긴급지원단을 격려하며, 청주시민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피해복구와 구호활동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시장은 "전주시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피해를 입은 청주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청주시 수해피해가 하루 빨리 복구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에는 지난 16일 300㎜에 육박하는 폭우가 내리면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해 청주시민들이 주택 침수와 도로변 유실, 농경지 침수 등 큰 피해를 입어, 피해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재용 기자

오정화 전주시의원,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가결

전주시의회가 올바른 부모역할 실천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에서 오정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부모교육의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시민들이 효과적인 자녀 양육방법과 올바른 부모 역할 등의 부모교육 참여를 통해 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워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오정화 의원은 "최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증가하면서 양육 가치관 등 부모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는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